행정안전부

2026 한국소방재난행정학회 창립 발대식 및 제1회 학술세미나

기조강연

기후변화와 국가재난관리체계 방향

2026. 9. 18. 원주시청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국장

황범순

목차

전 29장

구분	제목	내용	장수
Ⅰ	**재난, 무엇이 달라졌는가**	정의, 원인 이론, 기후변화	9
Ⅱ	**국가는 어떻게 대응하는가**	재난관리 4단계, 관리기구와 계선, 제도 변천	5
Ⅲ	**자연재난 대응 종합대책**	추진배경, 3대 추진전략	5
Ⅳ	**2026년 재난관리 추진계획**	생명존중사회, 대응역량 제고	7
Ⅴ	**맺음**	마무리	1

I

재난, 무엇이 달라졌는가

재난의 정의는 셋이고, 재난을 보는 눈은 네 번 바뀌었습니다. 기후는 그 눈이 감당하던 조건 자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재난이란 무엇인가

세 가지 정의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

국제기구

유엔 재난위험경감기구

공동체나 사회의 기능이 심각하게 붕괴되는 현상

국어

표준국어대사전

뜻밖에 일어난 재앙과 고난

제3조제1호 가목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조류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자연 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제3조제1호 나목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 UN-DRR 용어집 / 표준국어대사전

행정안전부

위험은 관리의 대상이고, 징후는 먼저 나타납니다

네 가지 이론

U. Beck

위험사회

과학기술의 발전이 새로운 위험을 낳고, 그 위험은 일상적으로 출현합니다

C. Perrow

정상사고론

안전장치를 아무리 늘려도 피할 수 없는 정상사고가 존재합니다

H. Heinrich, 1931

하인리히 법칙, 1 대 29 대 300

한 건의 큰 사고 앞에는 29건의 작은 사고와 300건의 징후가 있습니다

J. Reason, 1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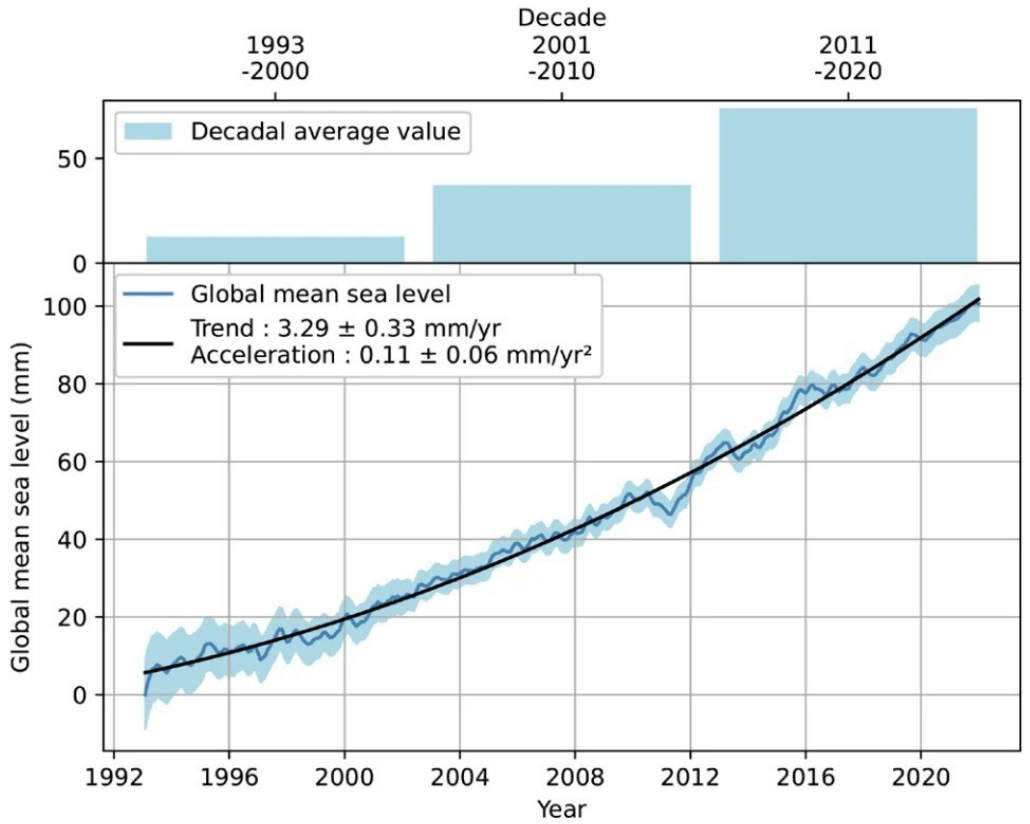
스위스 치즈 이론

여러 겹 방어막의 구멍이 한 줄로 정렬되는 순간 사고가 관통합니다

※ U. Beck, World Risk Society(1999) / C. Perrow, Normal Accidents(1984) / H. Heinrich(1931) / J. Reason(1990)

기후변화의 추이

IPCC 제6차 평가보고서, WMO, 기상청



전 지구 평균 해수면 추이(WMO, The Global Climate 2011-2020)

전 지구

1.1도
2011~2020년 지표면 온도 상승폭(기준 1850~1900년)

1.5도
가까운 시일 내 도달이 추정되는 온난화 수준

4.5mm
2011~2020년 연평균 해수면 상승. 2001~2010년은 2.9mm

국내

54일
2020년 중부 장마. 평년 32일의 1.7배

역대 1위
2023년 강수강도. 1973년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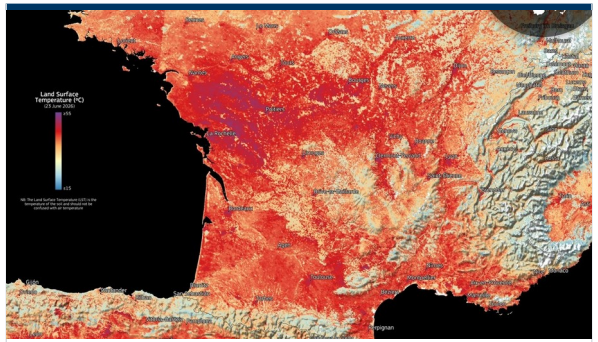
30.1일
2024년 폭염일수. 열대야 24.5일 역대 1위

※ IPCC 제6차 평가보고서 종합보고서, 2023 / WMO, The Global Climate 2011-2020 / 기상청 기후분석 및 관측기록

행정안전부

기후변화에 따른 국제 피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유럽, 2022년과 2026년

폭염

2022. 7. 포르투갈 47.0도(7월 기준)·초과사망 1,063명(잠정), 영국 사상 첫 40도

2026년 여름 서유럽 6~7월 평년 대비 +2.79도, 8개국 3만 명 이상 (AFP 집계, 잠정)

영상: European Union, Copernicus Sentinel-3 지표면온도(2026. 6. 23.) / IPMA·DGS·영국 기상청·코페르니쿠스·AF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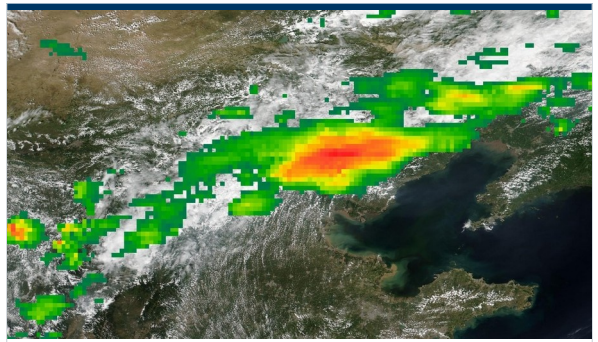


미국 텍사스, 2025. 7.

극한호우

7. 4. 극한호우와 급류 홍수, 130명 이상 사망

사진: 미국 해안경비대(USCG), DVIDS, 퍼블릭 도메인 / 「자연재난 대응 종합대책」 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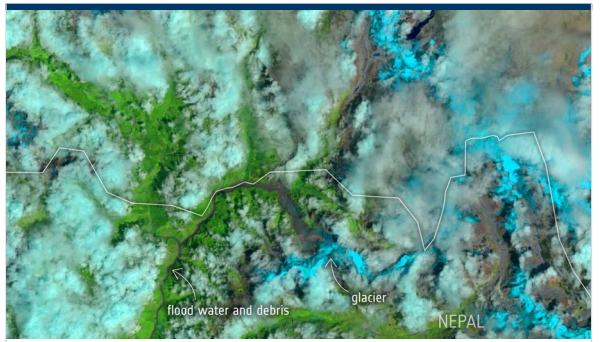


중국 베이징, 2025. 7.

폭우

7. 26.~29. 폭우, 30명 이상 사망

영상: NASA Worldview(NOAA-20 VIIRS·GPM IMERG 강수, 2025. 7. 27.), 퍼블릭 도메인 / 「자연재난 대응 종합대책」 1쪽



네팔, 2026. 8. 26.

암반·빙하 붕괴 대홍수

랑탕리룽 암반·빙하 붕괴(ice-rock avalanche), 트리슐리·나라야니강 유역

사망 1,252명·연락두절 4,216명 (NDRRMA 9. 3. 정오 기준, 잠정), 9. 1. 해외긴급구호대 44명 파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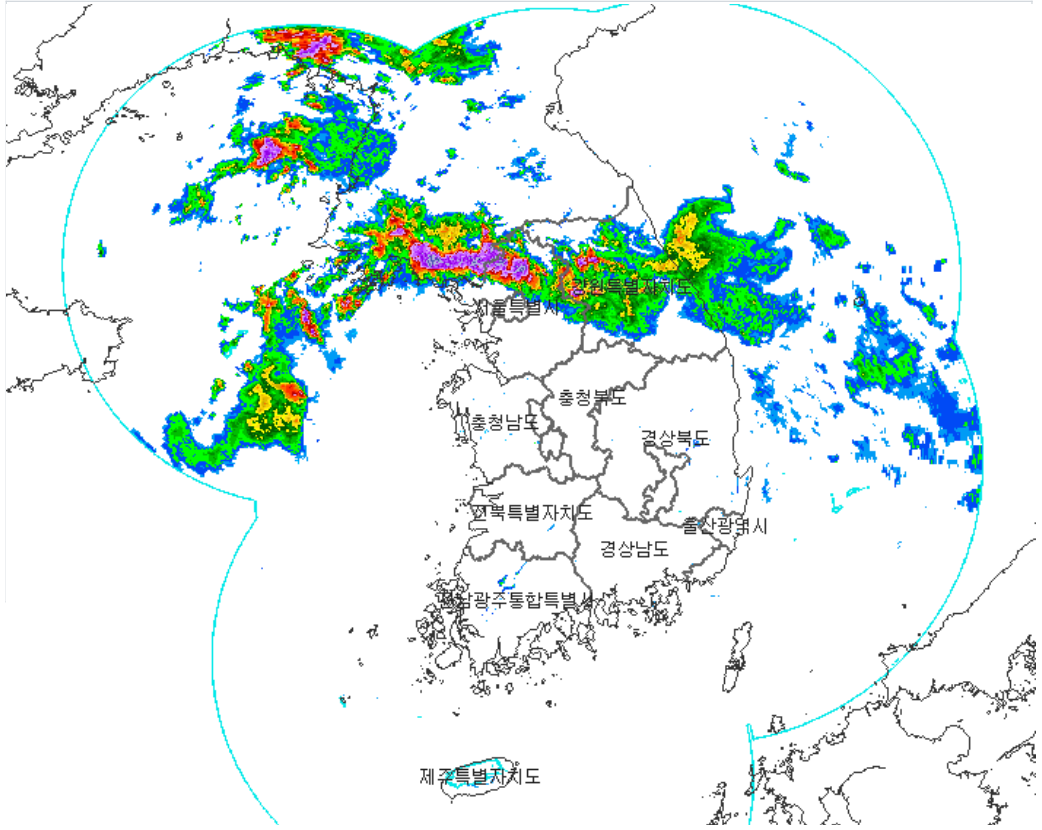
영상: ESA, contains modified Copernicus Sentinel data (2026) and Landsat-9 data, CC BY 4.0 / NDRRMA·UN News

※ 수치 출처는 각 카드 표기 / 사진·영상은 표기된 기관의 공개 저작물

행정안전부

정체전선이 만든 호우의 기록

2025년과 2026년



시기	기록
2025. 7.	**산청** 7. 19. 산사태, 사망 14명·실종 1명. 시천 누적 793.5mm **가평** 7. 20. 사망 7명. 1시간 최다 104.5mm **서산** 7. 17. 1시간 114.9mm
7. 16.~20. 전체	사망·실종 24명, 부상 33명
2026. 8.	**거제** 8. 17. 일강수량 654.3mm(기상청 기준 관측 이래 전국 3위), 시간당 124.5mm **통영** 산양읍·봉평동 특별재난지역 선포(8. 21.) **보성** 8. 30. 시간당 124.6mm

※ 기상청 관측기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집계, 행정안전부 특별재난지역 선포

행정안전부

국내 호우 피해, 2025년과 2026년

인명·재산피해와 특별재난지역

2025년

24명	사망·실종(7. 16.~20. 호우)
1조 848억 원	피해액. 최근 10년 단일 호우 1위
42곳	특별재난지역. 시군구 22, 읍면동 20

7. 16.~20. 호우로 사망·실종 24명, 부상 33명

여름철 전체 재산피해 1조 1,307억 원. 최근 5년 평균의 1.8배

2026년

654.3mm	8. 17. 거제 일강수량. 기상청 기준 관측 이래 전국 3위
2회	특별재난지역 선포. 8. 7. 안동·의성 4개 면, 8. 21. 거제 전역·통영 2개 읍면동
조사 중	피해액. 중앙합동조사 8. 29.~

8. 15.~18. 남해안 호우, 거제 사망 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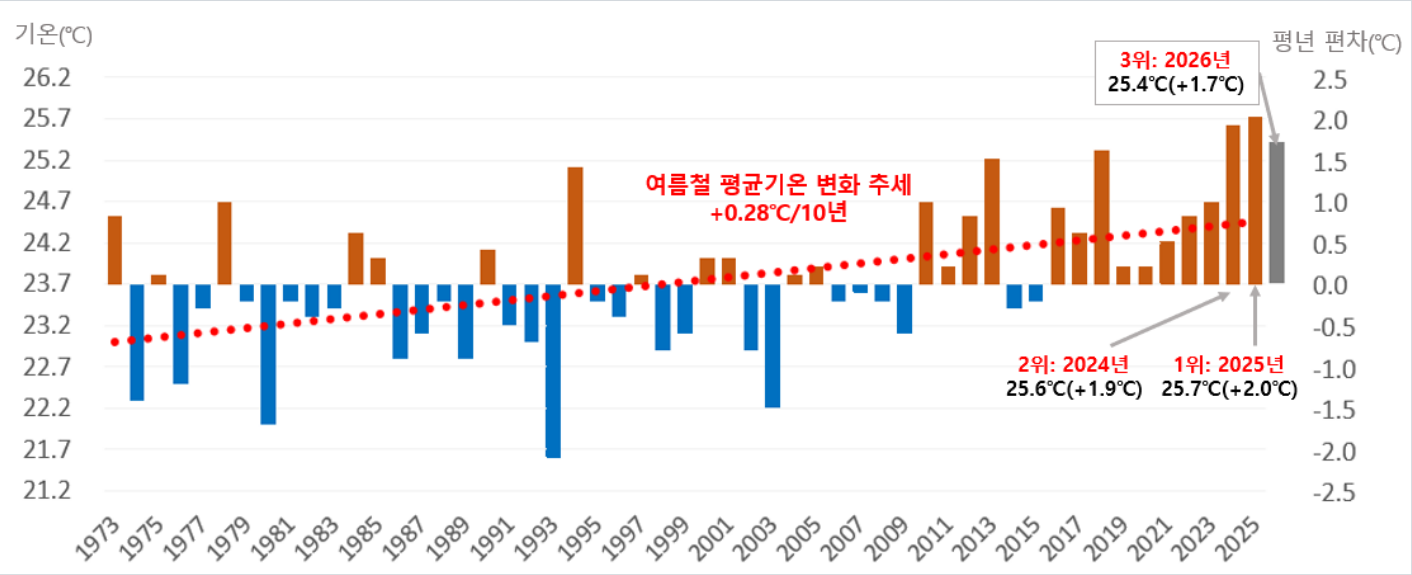
8. 28.~9. 1. 호우·강풍으로 사망 3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집계(2025년 확정, 2026년 사건별 잠정) / 행정안전부 특별재난지역 선포 / 기상청 관측기록

행정안전부

폭염의 기록

2025년과 2026년 여름철 기온



여름철(6~8월) 전국 평균기온 변화 추세(1973~2026). 자료: 기상청 「2026년 여름철 기후특성」(2026. 9. 3.)

시기	기록
2025년	여름철 평균기온 **25.7도** 역대 1위 (평년 대비 +2.0도)
2026년	**양산 42.5도**(8. 2.), 국내 관측 이래 최고(종전 홍천 41.0도) 여름철 평균기온 **25.4도** 역대 3위, 열대야 18.2일 역대 2위, 폭염일수 21.5일 첫 폭염중대경보 7. 12. 포항·경산 폭염 중대본 2단계 격상 8. 2.

※ 기상청 관측기록 및 「2026년 여름철 기후특성」 / 행정안전부 폭염 중대본 운영

국내 폭염 피해, 온열질환의 기록

2018년부터 2026년까지

2018년
온열질환
4,526명
사망 48명
폭염일수 31.0일 역대 1위

2024년
온열질환
3,704명
사망 34명
폭염일수 30.1일 역대 2위, 열대야 24.5일 역대 1위

2025년
온열질환
4,460명
사망 29명, 전년 대비 14.7% 감소
여름철 평균기온 25.7도 역대 1위, 온열질환자 감시 이래 2위

2026년, 9. 2. 기준 잠정
온열질환
3,986명
추정사망 34명
양산 42.5도(8. 2.), 국내 관측 이래 최고(종전 홍천 41.0도)
여름철 평균기온 25.4도 역대 3위, 열대야 18.2일 역대 2위

2026년 대응

6. 1. 폭염특보 개편. 폭염중대경보·열대야주의보 신설, 특보구역 183개에서 235개로 세분화

8. 2. 폭염 중대본 2단계 격상

※ 온열질환은 질병관리청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기준(추정사망 포함, 전수 통계 아님), 2026년은 9. 2. 기준 잠정 / 기상청 관측기록

II

국가는 어떻게 대응하는가

예방과 대비, 대응과 복구의 네 단계가 법률로 규정되어 있고, 각 단계마다 기구와 계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의 네 단계와 법적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Prevention
예방
재난 발생 위험을 평상시에 줄이는 활동

국가핵심기반 관리(제26조의2)
종사자 교육(제29조의2)

Preparedness
대비
재난 상황에서 수행할 사항을 미리 준비하는 활동

재난관리자원 비축(제34조)
재난안전통신망(제34조의8)

Response
대응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대처하는 활동

재난사태 선포(제36조),
응급조치(제37조)
대피명령(제40조),
긴급구조(제51조)

Recovery
복구
재난 발생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활동

특별재난지역 선포(제60조)
국고보조 지원(제66조)

재난안전 관리기구, 중앙

의사결정·자문 기구와 수습 기구

구분	의사결정 및 자문 기구	수습 기구
중앙	중앙안전관리위원회(국무총리) 안전정책조정위원회(행정안전부장관) 실무위원회(재난안전관리본부장) 중앙재난방송협의회, 중앙민관협력위원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행정안전부장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각 부처의 장관) **중앙긴급구조통제단(단장 소방청장)**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

대규모재난의 수습을 총괄·조정하고(제14조제1항), 관계 기관에 행정·재정상 조치와 직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15조제1항)

범정부 통합대응

범정부 통합대응이 필요한 대규모 재난에서는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합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가 재난관리 체계

총괄·조정, 수습, 긴급구조, 조사·지원

총괄·조정	수습	긴급구조	조사·지원
대 통 령 국가안전보장회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 행정안전부장관	중앙긴급구조통제단 단장 소방청장	중앙수습지원단 대규모재난 수습 지원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중앙사고수습본부 주관기관의 장	시·도 긴급구조통제단 단장 소방본부장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재난피해 상황 조사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시·도지사	시·군·구 통제단 단장 소방서장	지방합동조사단 지역 피해조사
실무위원회 위원장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시·군·구 대책본부 시장·군수·구청장	긴급구조 현장지휘소 현장지휘관	재난원인조사단 원인 규명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부단체장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재난관련 조직과 법령의 변천

1948년부터 2017년까지

1948	1962	1991	1998	2004	2014	2017
내무부	건설부	내무부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 소방방재청	국민안전처	행정안전부

법령의 변천

풍수해대책법(1967년) 자연재해 위주.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이어집니다

재난관리법(1995년) 인적재난 위주.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가 계기였습니다

기본법 제정(2004년) 재난관리법을 폐지하고 통합 기본법 체계로 전환하였습니다

기본법 개정(2014년, 2016년)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용어와 범위의 변화

1995년 이전 인적요인에 의한 피해에만 재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2014년 이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모두 재난으로 통칭합니다

계기가 된 재난: 성수대교 붕괴(1994년), 삼풍백화점 붕괴(1995년), 태풍 루사(2002년), 대구지하철 화재(2003년), 세월호 사고(2014년), 코로나19(2020년)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 제도 연혁

III

자연재난 대응 종합대책

극한기후에 대비한 자연재난 대응 종합대책입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5년 10월 2일 마련하였습니다.



왜 종합대책을 만들었는가

추진배경과 비전

- 기후위기로 극한호우와 폭염, 가뭄, 대설 등 **예측을 뛰어넘는 기상현상**이 빈번해졌습니다
- 예외적 현상이 아닌 일상화된 이상기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자연재난 대비·대응체계 전반 전환 필요

국내 사례

호우	’25년 여름철(6~8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으나 좁은 구역에서 **단기간에 강한 호우**가 내리는 경향 * 7월 17일 서산, 산청, 광주 지역에서 7월 1시간최다강수량 **극값 경신**
가뭄	강릉 가뭄에 대해 **최초**로 자연재난 **재난사태 선포**(8.30)
폭염	’25년 여름철(6~8월) 평균기온 **역대 1위(25.7℃)**
대설	’24.11월 수도권 폭설로 **수원 일신적설 역대 1위**

기본방향

물적기반	+	정보기술	+	통합대응
기후탄력형 **물적기반 확충**을 통한 **자연재난 대비 강화**		**AI** 등 **정보기술**을 활용한 **재난 예측 및 대응 고도화**		극한기후에 적응할 수 있는 **범정부 통합대응체계 전환**

※ 관계부처 합동, 「극한기후에 대비한 자연재난 대응 종합대책」, 2025. 10. 2., 1쪽·4쪽

행정안전부

추진전략 1. 기후탄력형 물적기반 확충

설계기준 전환, 노후시설 보강

물적기반 확충 노후 SOC → 기후탄력적 SOC 전환, 예방투자 대폭 확대

설계 기준 전환	방 재	과거 **기준**에 맞춘 SOC 방재성능목표 설정	✓ 기후 패턴 변동 감안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상향**
	하 천	**일률적 설계빈도 적용** (국가 100~200년, 지방 50~200년)	✓ **일률적 기준 삭제**, 위험도 고려한 **선택적 설계빈도 적용**
	댐	**과거 최대강우에 의존**한 설계기준 적용	✓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반영토록 설계기준 강화
노후 시설 보강	하수도	노후 하수관로(20년이상) **44%(7.6만km)**	✓ **결함 확인 관로**(1,350km) **우선 교체·보수**(~'30)
	하 천	국가하천 제방 **11.6%(468개)** 보강 필요	✓ 과거 **피해발생 제방 중심** 신속 보수·보강 착수(~'27)
	댐	노후 댐(30년 이상) **56%(19개댐)**	✓ **비상방류시설** 설치, **댐체 보강** 등 안전성 강화(~'31)
인프라 확충	홍 수	기존 시설만으로는 **대응 곤란 집중호우 빈번**	✓ 홍수조절 및 저류 위한 **물그릇 확대** (지류 **저류지** 및 **홍수조절댐**(봉화댐·항사댐) 조성, ~'31)
	도시배수	상습침수구역 **배수력 부족**	✓ **빗물터널** 적기준공 및 추가 설치(2→4개) ✓ **상습침수지역 하수관로·펌프장 신·증설**(210→270개소)
	시설관리	진입차단시설 설치에도 침수사고 발생, 지자체 **빗물받이 관리 한계, 맨홀 추락사고** 지속	✓ **지하차도 진입차단기준 강화**(15→5cm) ✓ **맨홀 추락방지시설** 의무화 및 **빗물받이 유지관리전문기관 활용** 권고
	가 뭄	**지역적 강수 편중** 등 가뭄 발생 증가에도 불구, **댐 중심 공급**(91.5%) 등 안정적 물공급 한계	✓ 상수도 확충, 노후상수관로 정비 등 **공급 인프라 확충** ✓ 국가 주도 **댐·대체수자원 연계 공급, 물순환 시설** 설치

1,350km

정밀조사로 결함이 확인된 노후 하수관로. 우선 교체·보수(2030년까지)

210개소에서 270개소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확대. 하수관경 확대와 펌프장 집중 설치

15cm에서 5cm 이하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작동기준 강화

과거 기준에 맞춘 설계를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준으로 바꾸고, 결함이 확인된 관로와 피해 이력이 있는 제방부터 보수·보강에 착수합니다.

※ 관계부처 합동, 「자연재난 대응 종합대책」, 2025. 10. 2. 하수관로는 8쪽과 별첨 85쪽, 중점관리지역은 11쪽, 진입차단시설은 14쪽

추진전략 2. AI 기반 재난 예측·대응 강화

원문 19쪽부터 21쪽



기상예보 수치모델 해상도를 8km에서 3km로 높이고, 홍수 수위 예측 시간을 30분에서 10분으로 단축합니다. 수위관측소는 933개소에서 1,191개소로 늘리고 산악기상관측망을 확충합니다.

※ 관계부처 합동, 「자연재난 대응 종합대책」, 2025. 10. 2. 수치모델 해상도는 19쪽, 홍수예측과 수위관측소는 20쪽, 산악기상관측망은 21쪽

행정안전부

추진전략 3. 국가통합대응체제 전환

중앙·지방·시민사회의 협력



1시간 100mm(안)

(가칭)재난성호우 긴급재난문자 기준의 추가(안). 확정 기준이 아닙니다

읍면동장

주민대피 명령 권한 부여. 읍면동별 재난상황 종합지도 작성

1대 1 매칭

우선대피 대상자와 대피도우미. 주민대피지원단 운영근거 마련

(가칭)재난성호우 개념을 신설하고 긴급재난문자를 별도로 두어 선제적 주민대피를 유도합니다.

※ 관계부처 합동, 「자연재난 대응 종합대책」, 2025. 10. 2. (가칭)재난성호우 기준(안) 29쪽, 긴급재난문자와 대피명령 30쪽, 주민대피지원단 36쪽

Ⅳ

2026년 재난관리 추진계획

행정안전부

국민 안전권의 실질적 보장

생명존중사회 구현 초석 마련

○ **(안전권 명문화)** 「생명안전기본법」이 법률 제21729호로 2026년 6월 2일 공포되어 12월 3일 시행합니다

○ **(이행력 강화)** 국민생명안전위원회가 대통령령 제36319호로 5월 12일 설치되어 7월 28일 출범하였습니다

시행 일정

2026. 5. 12.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7. 28. 출범

2026. 12. 3.

법 본체 시행

2027. 6. 3.

종합계획·안전지수·
사고조사위원회 조항 시행

무엇이 달라지는가

지금까지 안전은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였습니다.

→

안전권이 명문화되면 안전은 국민이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됩니다

※ 생명안전기본법(법률 제21729호) / 대통령령 제36319호

사회재난 예방·안전 관리 체계 혁신

○ **(법률 제정)** 도시 과밀화와 다중밀집시설 대형화 등 사회재난의 위험성에 맞는 정부 역할과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재난대책법」을 제정합니다('26년)

○ **(예방·대비 강화)** 고위험 지역과 시설에 특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시기별로 사고 발생 전 책임기관의 의무를 확대합니다

○ **(위험요소 제거)** 국가핵심기반시설을 민간위탁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특정관리대상지역을 종합 관리합니다

지금까지

사후 대응 중심

사고가 난 뒤에
책임을 묻는
구조였습니다

앞으로

사전 의무 중심

사고 발생 전에 책임기관이
이행할 의무를 법으로 정하고
시기별로 확인합니다

범위

국가핵심기반 확대

지정 범위를
민간위탁기관 등으로
넓힙니다

※ 행정안전부, 2026년 재난안전관리 추진계획

재난안전관리 전문성 강화

자격, 인증, 자원, 인력

○ **(전문자격 도입)** 「재해영향평가법」 제정 후 재해영향평가사 자격을 신설하고('26년),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제도의 기반을 마련합니다('28년 본격 도입)

○ **(안전관리 강화)** 기업 재난관리의 범위를 확대하고 인증평가단 전문인력을 5명에서 30명으로 늘리며, 시설물 안전점검을 고도화합니다('26.上)

○ **(자원 통합관리)** AI 기반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검증된 국가재난관리 물류기업을 지정하여 운송에 협업합니다('26년~)

○ **(재난조직 역량)** 지방정부 재난안전 부서장 대면 교육을 강화하고, 재난안전상황실과 행정복지센터 등 일선 현장 인력을 확충합니다 ('26년 715명 예정)

자격제도 도입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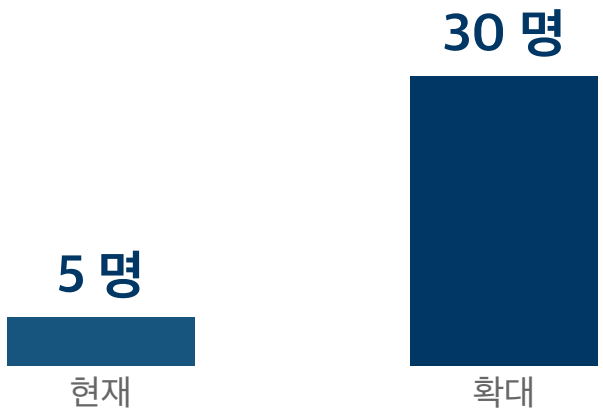
'26년

재해영향평가사 자격 신설

'28년

공인재난관리사 본격 도입

인증평가단 전문인력 확대



일선 현장 인력

715명

2026년 일선 현장 인력 확충

※ 행정안전부, 2026년 재난안전관리 추진계획

AI·CCTV를 활용한 과학적 재난관리

○ **(실시간 위험관리)** 드론 취득 정보를 중앙과 지방 상황실에 실시간 연계하고(4개 시·도, ’26년~), 위험상황 탐지 AI를 개발하여 민간에 제공합니다

○ **(맞춤형 정보)** 개별 재난·안전 시스템을 국민안전24로 일원화하고(’26년), AI로 사용자 위치를 인식하여 기상특보와 대피소 정보를 전달합니다

○ **(데이터 통합)** 위성과 드론, CCTV의 정합 영상과 위치기반 재난상황 AI 자료 등 재난안전데이터를 표준화하고(’26년, 77억 원) 공유플랫폼으로 통합합니다



4개 시·도
드론 정보 중앙-지방 상황실 실시간 연계

5개에서 1개로
개별 재난·안전 시스템을 국민안전24로 일원화

77억 원
2026년 재난안전데이터 표준화 예산

1,800여 개
공유플랫폼 연계 데이터. 56개 기관

※ 행정안전부, 2026년 재난안전관리 추진계획

극한기후 대비 예방 역량 강화

○ **(방재성능 상향)** 기후변화를 고려하여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상향하고, 자연재난 예방·복구 시설의 방재지침을 통합합니다('26년)

○ **(투자 확대)** 재난안전특별교부세와 소방안전교부세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풍수해 생활권과 급경사지 정비 등 재난 예방시설 재정지원을 확대합니다

○ **(실전 대비)** 지반침하 등 신설 유형의 매뉴얼을 마련하고('26.上), READY Korea를 연 4회 실시합니다

50년에서 100년



서울시 방재성능목표
빈도 상향

1조 1,148억 원

1,240억 원 증액



2026년 재난 예방시설 재정지원.
1,240억 원 증액

4회 / 년



READY Korea
잠재 위험 대응 훈련

※ 행정안전부, 2026년 재난안전관리 추진계획

국민 안전 우선 대응체계 구축

재난문자, 주민대피, 유형별 관리

○ **(재난문자 보완)** 중복 송출 방지 서비스를 도입하고(시범 부산·세종 ’26.上, 전국 확대 ’26.下), 글자 수를 90자에서 157자로 확대합니다(’26.下)

○ **(신속 대피)** 주민대피지원단을 전 시·군·구로 확대하고(현재 185개), 민방위 사이렌을 재난 경보까지 확대하며, 주민대피 표준지침을 제정합니다(’26.下)

○ **(유형별 집중 관리)** 호우와 대설 취약지역·시설을 중점 관리하고, 폭염과 한파 쉼터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며, 초고속 산불 주민대피체계를 고도화합니다(’26년~)

재난문자

기존 90 자

확대 157 자

대피 준비와 **즉시 대피**를 구분한 단계별 행동유도 메시지를 담기 위해 글자 수가 필요합니다

중복 송출

시범 ’26.上
부산·세종

후

전국 확대 ’26.下

2026년 상반기 부산과 세종에서 시범 운영한 뒤 하반기에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주민대피지원단

185개

에서

전국으로

대피 대상자와 도우미를 **1대1**로 매칭합니다

※ 행정안전부, 2026년 재난안전관리 추진계획

감사합니다

